

# C&중 협력업체 긴급자금 100억원 지원

## “대통령 ‘특별법’ 발언 F1 지원 강력한 의지”

전남도, 부정적 해석 경계

광주시·전남도 건설·조선사 구조조정 후속대책

### 임대아파트 입주자 임대보증금 피해 최소화 선박 업체 업종 전환 유도...실직자 취업 알선



전남도는 21일 오전 도청 비상경제상황실에서 채권은행단의 조선·건설사 구조조정 발표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박재영 전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긴급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가졌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와 전남도가 21일 건설·조선사 구조조정과 관련, 긴급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마련한 대책의 골자는 주민,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 전략’이다. 또 대주, 삼능건설, C&중공업 협력업체의 인력 구조 조정에 따른 실직자들을 위한 인력 재배치 방안도 마련됐다. 전남도는 목포시와 함께 C&중공업 협력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안전자금 50억원, 중소기업발전자금 50억원 등 총 100억원을 긴급 편성에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대주건설이 분양한 10개 단지 2천340세대의 경우 대한주택보증과 분양보증과의 계약이 체결된 상태 때문에 일단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대주건설이 청산되도 분양 납입금의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대아파트 입주자(397세대)들이 임대보증금 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주택권자의 국민은행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워크아웃이 결정된 삼능건설이 공사물 받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현재까지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삼능이 이 사업을 지속할 경우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포기할 경우 신규 사업자 공모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최종안으로 사업을 광주시 도시공사에서 직접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워크아웃 대상인 경남기업이 맡고 있는 ‘수원집단에너지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의해 사업 주관사인 수원에너지(주)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경남기업이 채무를 이행할 경우 지역 6

개 업체에게 우선 공사대금 등을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전남도=채권단 금융지원 중단 결정을 받은 C&중공업 협력업체에 기업지원자금을 우선 공급하고 실직자들을 위한 인력재배치 작업을 돕는다.

전남도는 21일 C&중공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과 대한조선 워크아웃 등 도내 중대형 조선소의 구조조정에 따른 긴급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세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세부 대응 방안 따르면 도는 우선 C&중공업 협력업체 금융지원을 위해 목포시와 함께 각각 경영안전자금 50억원, 중소기업발전자금 50억원 등 총 100억원을 편성해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지원대상은 C&중공업으로부터 자재대금과 임금 등을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 등이다.

하지만, 협력업체의 신용도와 담보제공 능력 등의 문제로 보증 지원에 애로가 뒤따르고 있어 이날 중소기업청에 C&중공업 협력업체 지원에 관한 특별보증상품을 개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전남도는 C&중공업의 설계·현장 인력은 본인이 요청하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나 도 자체 취업알선을 통해 취직을 도와주기로 했으며, C&중공업이 이미 수주해 놓은 60여 척의 계약물량은 선주와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건조되도록 계약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선박용 블록 제작 등에 집중돼 있는 지역 협력업체 사업 분야도 해양구조물이나 산업기계 등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권유할 계획이다. 워크아웃 결정이 난 대한조선은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조업 차질이나 납기 지연 등을 방지할 예정이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윤정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가 지난 주말 전남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의 F1(포플러원)자동차대회 관련 발언이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전남도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6일 전남에서 열린 지역발전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특별법을 꼭 만들어야 하나’라고 말한 것은 원칙적인 발언이었을 뿐’이라며 ‘실제로는 F1을 지원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전남도가 이처럼 대통령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선 것은, 일부에서 ‘대통령이 F1지원법 제정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F1지원법 제정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자료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F1 특별법이 통과되면 특별법에 맞춰 국가의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에 이어서 나온 것’이라며 ‘사업에 필요하면 특별법이 없어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사업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원칙론적인 의미’라고 해석했다.

전남도는 또 “그 사업(F1)이 좋으면 관광객을 끌고 올 수 있도록 무안공항 활주로를 국가가 자연적으로 연장해주고, 도로도 건설해 주어야 한다.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까지 대통령이 말 한 것은 F1 대회에 대한 지원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대통령의 F1 대회에 대한 지원의지 표명을 사업추진의 탄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F1 대회에 대한 국가의 지원범위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안을 마련,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F1 대회 지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겠다’고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

## 벼랑 끝 지역경제 활로는 없나

# 중소·서민들 숨통 죄는 고금리·‘돈맥 경화’ 주범

- 1 건설업 살려야
- 2 지방은행 BIS 낮추라
- 3 지역제품 사주자

광주 하남산단에서 기계부품 업체를 운영하느 김모(48) 대표는 저금리시대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는다.

시설자금으로 은행에서 빌린 5억원의 연 이자율이 경제위기전인 지난해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7%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9%대로 오하러 올랐기 때문이다.

김대표는 “정부는 은행에 금리를 내리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며 “최근 2% 포인트가량 금리가 올라 이자부담이 매달 100만원이 늘었다”고 하소연했다.

한국은행이 이달초를 포함해 3개월동안 기준금리를 2.75%포인트 내려 2.50%까지 낮췄지만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따라 기준금리를 비롯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등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금리는 요지부동이다.

개업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을 찾은 정모(43·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6천만원의 대출을 신청했지만 까다로운 심사과 높은 금리에 포기하고 말았다.

정씨는 “담보비율도 높지 않은데도 금리도 연 6.9%로 생각보다 높아 대출신청을 접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일 기준 K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변동형) 금리는 연 4.4%~7.0%로 지난해 6월말의 연 6.62%~7.32%에 비해 최대 금

## 정부, 말로만 대출 독려 효과 없어 BIS 비율 낮춰야 지역경제 활기

리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최저 금리가 내려갔다고 하지만 신용평가에서 최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극소수여서 서민들의 체감금리는 여전히 영향권에 머물러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CD금리에 은행측 마진인 가산금리를 더하게 되는데 은행들이 높은 자금조달 비용을 이유로 가산금리를 올려 실제 금리 인하를 막고 있다. K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6개월만에 1.1%에서 3.6%로 2.5%포인트 올렸다.

체감금리가 내리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은행들이 BIS(국제결제

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2%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장에서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자 최근 BIS 비율이 10%면 충분하며 은행측에 대출을 독려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

은행측은 “정부가 BIS비율로 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판단하면서

BIS비율을 완화해도 된다며 대출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언제 BIS비율을 들이댈지 몰라 눈치만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마당에 정부의 건설 및 조선사 구조조정까지 겹쳐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대출을 옥죄릴 가능성이 높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BIS비율을 높이면 그만큼 대출역력이 줄어드는데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채권이란 부담까지 안고 있다”며 “지방은행이라도 현실에 맞게 BIS비율을 과감하게 낮춰야 지역경제가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SAFA** 사파 제조회사

“언제 어디서든 조이케질만 있으면 피로는 확 풀어줍니다.”

**조이케질 SF-01**

042)365-3200 • 1688-1471 • 02-487-8256

NAVER

## 이혜민 FTA 교섭대표 “EU와 관세 철폐 의견 접근”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21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관세 철폐와 관련해 양측의 의견이 접근했고 그에 따라 수정 양허안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EU 통상장관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품목별

로(관세철폐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현재 한국과 유럽연합 간 FTA는 ▲상품양허(관세감축) ▲관세환급제도 ▲원산지 ▲자동차 관련 기술표준 ▲서비스 등의 쟁점이 남아 있다.

이 대표는 “통상장관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관세환급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이슈로

등장했기 때문”이라며 “협상은 일부에서 진전이 있어도 다른 분야의 입장이 바뀌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가 합의됐는지는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FTA와 관련해 “공정회를 통해 FTA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